

러시아의 입장과 북러 관계

고재남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머리말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그동안 정경 분리에 입각한 대북 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그 결과 북한측과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분단 55년여만에 처음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는 물론 양국의 국내 정세,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평화 통일의 달성은 일차적으로는 남북한의 책임이지만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들을 고려해볼 때, 주변 4국들, 즉 미·일·중·러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은 물론 주변 4국들간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이 틀림없다.

주변 4국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한민족의 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일단 피력하기는 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파장과 결과에 대한 이해 득실을 저울

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모든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 국익의 보전 및 확대에 있음을 감안해볼 때, 주변 4국들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해 득실과 이에 따른 對한반도 정책은 향후 정상회담의 성패를 포함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소외되자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의 강화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정책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미·일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코소보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 과정은 핵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남북한간 경제 통합은 남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아가 국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총선 및 금년 3월 대선을 계기로 체제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및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과 국제 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 회복을 추구하는 푸틴 정부의 출범이 남북정상회담 등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 지지

그러면 러시아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적극 지지하면서 한반도 분단후 정상간 첫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은 4월 28일 김

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는 남북 대화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양측간 대화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브게니 아파나시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러시아는 남북한이 6월 회담 이후에도 정상회담을 지속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이 가속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연합통신」(2000. 5.9))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양측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한국언론재단 조찬세미나(2000. 5.24))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남북한간 경제 통합은 남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의 방대한 천연 자원과 과학 기술 능력과 남북한의 자본 및 노동력 등이 결합하는 ‘3각 또는 쌍무 차원’의 경제·통상 협력(예: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정

상회담이 지난 1994년 8월로 예정되었다가 김일성 주석의 돌연사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던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한이 미국, 중국 등 제3국의 개입없이 주체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 및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국들의 협조가 불가피함을 인식, 대북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 특히 미국·중국과 정책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남북한 양측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한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중국 등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정부 또는 북측과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관해서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언급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비핵지화의 유지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 지지 넷째, 남북한과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확립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 균형 유지 등이다.

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 및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남북 관계에서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남북 대화를 통한 점진적 평화 통일의 지지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안정과 기득권의 유지라는 외교 정책의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 추구 및 미·일·중 등 주변 3국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즉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비핵지화의 유지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 지지 넷째, 남북한과 호혜적인 경제 관계의 확립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 균형 유지 등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러시아는 통일 한국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 위협 국가라기 보다는 동반자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 위협 국가라기 보다는 동반자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있는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남북 대화 및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등 정치·경제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외부 세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 통일로 자국에 적대적인 통일 국가가 탄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변 어느 국가보다도 지지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연합할 수 있는 국가는 통일된 한국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은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아·태 지역으로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보다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작업으로 파악하면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정치·경제 체제간 유사성을 증대시키면서 제반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폭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 한국은 대외 관계, 특히 대미 관계에서 외교 정책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심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주변 3국이 이에 개입할 경우 러시아도 인접 국가로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 주변 4국들간 세력 경쟁

축진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와 같은 군사·안보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국제회담' 형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다자 국제회담을 통한 평화체

제의 구축 희망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와 같은 군사·안보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국제회담' 형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4자회담에서 자국이 배제된 데 깊은 불만을 가졌다. 비록 우리 정부의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설득 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켰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문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작년 5월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 및 자신이 지난 70년대 초부터 주장해온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4대국 보장론'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협조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떤 국가를 위협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다자 안보 협의체의 확립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 주도의 TMD 개발 및 배치를 촉진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킴은 물론 역내 국가간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일본의 TMD 개발 및 배치를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억제시키

주한 미군 및 미·일의 대북 수교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일의 대북 수교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 승인 조기 완료와 북한의 국제 기구 활동의 참여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측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 완료하였으나, 지난 2월 신조약 체결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미사일 발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

북러간 선린·우호·협력 관계의 증진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북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정책 및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는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목표 및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이 푸틴 정부 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결과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인 북러 관계의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및 미·일의 대북 수교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미·일의 대북 수교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교차 승인 조기 완료와 북한의 국제 기구 활동의 참여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비록 북한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를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할지라도 이는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변화는 남북 관계는 물론 북러 관

러시아는 또한 주한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을 억제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중·일간의 군비 경쟁을 약화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물론 최근 들어 NATO의 동진과 더불어 한·미·일 동맹 관계를 동북아 지역내 NATO형 대러 견제 군사 블럭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증

계를 개선시켜주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을 끌어온 1961년의 소위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 즉 '북러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지난 2월 9일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舊소연방 붕괴후 어정쩡한 외교관계로 남아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아직 러시아 의회의 비준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신조약의 본문이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이타르 타스'(Itar Tass)에 따르면 신조약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등 보편적 원칙 하에 발전시켜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북러 관계는 양국이 당면한 심각한 경제 위기, 점증하는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북한의 對서방 관계 개선 우선 정책, 러시아의 남한 경사적 한반도 정책의 불가피성 등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러 관계는 푸틴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 NATO 및 이라크 공습과 이에 따른 북한의 대미 위협 인식 증대와 미사일 개발 등과 같은 현안을 둘러싼 이견 지속, 미·일의 TMD 개발 및 배치 노력, 김정일의 대러 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양국 관계가 과거보다는

향후 북러 관계는 첫째, 신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관계가 심화, 확대되는 쪽으로 발전될 것이다. 둘째, 양국간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제한적이거나 양국간 군사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선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그 개선의 폭과 질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러 관계는 첫째, 신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관계가 심화, 확대되는 쪽으로 발전될 것이다.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북한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와 선린·우호·협력 관계의 복원을 통하여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위기의 극복,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협조 유도, 군사 협력의 재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양국간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4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 채무가 양국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남북한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경우,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또는 쌍무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의 확대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북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북러간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북러 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제한적이거나 양국간 군사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및 부품 판매는 1992년 이래 공식적으로는 전무하나 CIS 등 제3국을 통한 舊 소련제/러시아제 무기의 북한 유입은 계속되어왔다. 특히 신조약이 “체약국 일방이 군사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시 즉각 연락을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분쟁 발발시 북러간 어떤 형태로든 군사 협력 또는 안보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러 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번영에 기여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북러간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적극

적인 지지가 증명해주듯이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북러 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푸틴 정부의 對한반도 정책은 과거와 같이 한러·북러 관계 차원에서보다는 러시아의 세계 전략과 이에 따른 對동북아 정책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미·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즉 푸틴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의 회복을 위하여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한반도 안정 및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다자 안보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기존의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단지 러시아가 지난 10여 년간의 한러 관계에서 가능성 및 잠재력에 비하여 실질 협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러시아는 명분보다는 결과 중시의 실질 협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對 한반도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다. **9**